



“
정파 관계없이
강릉시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
강릉시의회 의원

11대 후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벚꽃의 계절이 훌쩍 지나고 5월이 되면서 날씨도 제법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시의회 구성원이 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지면으로 찾아 뵙는 기회가 생기면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당과 관계없이 강릉시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물론이고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강릉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릉 북부권 도농통합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균형 발전’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치렀지만, 북강릉 지역은 도심권보다 관심을 덜 받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헤쳐 나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현재 도시 재생사업의 하나로 ‘주문진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집 수리도 지원하고 도로의 환경도 개선하는 등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사진 도로와 골목길이 많아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 재생사업과 잘 연계한다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실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리라 봅니다.

지난 2019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관한 건의안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강릉시를 돌아다녀 보면 도심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도시 환경이 저해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면 어김없이 화물자동차들의 주차로 도로 확장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화물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불법 주정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거환경 문제와 거주민들의 불편으로 관심도와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주차난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는 그 연관성이 매우 큼니다. 또한, 도심 주차난 해소와 미세먼지 예방 등을 통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한 만큼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건의안을 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에서 북부권 교통 혼잡문제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광 추세는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자가용 차량이 동해안을 방문하고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관광지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릉에 사는 주민의 차량조차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혼잡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관련 부서 그리고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민생을 챙기는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여간해선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을 위해 위로와 희망을 말씀을 전하신다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분들의 수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과 정부 대출 등 보조 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강릉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전염병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분기 백신이 보급되고 이후 하향곡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그마저도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힘을 단련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 낼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
초심 잊지 않고
주민들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힘 쓰겠습니다

김용남
강릉시의회 의원

11대 후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녕하십니까? 2018년 출범한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어느새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강릉시의회에 몸담으면서 가졌던 초심은, 소외당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에 적절히 반영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했는지, 행정의 규칙과 원칙을 이해하고 강릉시 공무원들과 지속해서 협의하였는지, 그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람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1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도심권과 비교해 발전이 더딘 도농통합지역에 관심 커
반려동물 등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광과 연계한 정책도 필요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강릉시 동물사랑센터’를 방문하셨는데요, 향후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강릉시 동물사랑센터’를 방문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매년 휴가철이면 유기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홍보와 단속이 지속해서 이어져야 하며,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등록방법,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수요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강릉시의회도 관련 산업 기반 구축과 관광산업 연계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강릉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주요 현안이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강릉시는 21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 형태는 농촌, 어촌, 산촌, 도시근교 지역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도 그 규모는 작을지라도 종류는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습니다. 도심권은 2018 동계올림픽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SOC 산업, 관광산업 등 많이 변화하고 활성화됐지만, 도농통합지역은 농경지, 상·하수도,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또 각종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매년 같은 피해가 거듭되고 있는, 대책이 시급한 지역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주민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정활동입니다. 지난해 제2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안전 지원제의 신중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계층마다, 어떤 제도인지에 따라 그 효율성은 다릅니다. 또, 그중엔 직접 행정기관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시의회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강릉시 집행부와 함께 어떤 제도가 가장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보낸 지난 한 해가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로 농수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생필품의 가격은 오히려 인상되는 등 주민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생계문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만,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만 더 참고 예방 활동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021. 3. 22 ~ 3. 26 / 5일간)



강릉시의회는 지난 3월 26일 제29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한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4건을 상정·의결했으며, 이재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이어졌다.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재안 의원의 제안설명 후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결정되었는데,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9명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강릉시의회회의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강릉시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별로 강릉문화재단과 KIST 천연물연구소를 방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관리 및 운영방안 등 발전 방향에 관해 함께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2021.3.22.)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휴직률 증가에 따른 방안 모색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개선책 필요



김복자 의원

저는 강릉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강릉시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휴직으로 인한 현원 부족으로 대시민 서비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의 휴직률 증가는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질병 휴직 현황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 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 휴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인사이동과 정비례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

적인 대안은, 대체인력 풀 구축입니다.

둘째, 공직기강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욱 숙고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주 52시간제의 적용으로 인해 척수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의 고통을 낮춰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이 1:1로 친밀감 속에서 52시간 이상, 지속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결의문 (제2차 본회의 2021.3.26.)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음. 하지만,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이송처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의회 및 시·군·구 의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맞아 기념수 식재

1949년 지방의회 최초 구성... 1991년 새 출발



강릉시의회는 지난 4월 13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만 참석했으며, 의회 청사 앞에 황금소나무를 심고 시민에게 변함없이 봉사하는 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의회가 해산되는 등 역사적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강릉시의회는 1991년 4월 9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 같은 해 4월 15일에 개회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새 장을 열었고, 2021년 4월 15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강희문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었고, 지난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었다”라며 “올해를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 구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강릉시의회는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해 동해 지방해양경찰청과 권성동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강릉은 경포해변과 안목, 주문진, 금진 등 주요 관광지가 해안지역을 따라 형성되어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은 해양 관련 민원 처리 시 속초와 동해 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해 6월 강릉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의회 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강릉지역의 해양민원 출동 건수는 2017년에 267건, 2018년에 336건, 2019년에 3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속초·동해해경이 강릉지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현재의 이원 체계에서는 우리 시의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위원회, KIST 천연물연구소 방문(3.23)



행정위원회, 강릉문화재단 방문(3.2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4.9)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4.14)